

2011.11.21 미래정책연구실

□ EU, 농가보조금 축소 CAP 개정안 발표

1. WSJ(2011.11.13) 주요 내용

- EU 집행위원회는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해, **대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**하는 내용을 담은 CAP(Common Agricultural Policy) 개정안 초안을 지난 수요일 발표함.
 - 이번 개정안을 통해 **농가보조금을 개별 농가당 연간 30만 유로** 수준으로 유지하여, 직접지불금에서 연간 25억 유로의 예산 감축을 제안함.
- 또한, 전체 직접지불금 중 1/3을 농업인이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함(녹색 직불금).
 - 경작가능한 토지의 최소 7%는 '생태학적 부지'로서, 숲이나 완충대 등으로 활용하고, 항상 3가지 이상의 작물을 심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함.
 - 그러나 농가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, 일부에서는 '7% 원칙이'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음.
-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EU의 농업보조금을 둘러싸고, 더 넓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환경론자와 부유한 유럽인들과, 이러한 변화가 유럽의 식량자급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소비자와 농업인들 간에 견해차가 매우 큼.
 - 영국을 위시로 한 소수 국가들은 보조금 축소를 지지하며, 프랑스, 폴란드 등 농업이 발달한 국가는 보조금 확대를 주장함.
 - 개도국들은 EU의 보조금 감축이 농업인들을 빈곤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CAP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타냄.

- 한편, 유럽 내 이익단체들은 현재 대규모 농업경영체가 지나치게 많은 농업보조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함.
 - 현재 상위 25%의 대규모 농업경영체에게 전체 보조금의 74%가 지급됨.
- 이번 개정안은 2013년 이후부터 시행되는 CAP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, EU는 제기되는 비판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임.
-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들은 개인의 농지 사용을 제한하고, 유럽 농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함.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